

9.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□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□ 발 의 자 : 권기훈, 박우근, 박창석, 손한국, 윤권근, 이성오, 전경원,
하병문, 하중환 의원

□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21일

□ 상정일자 :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5차 경제환경위원회(2023년 12월 13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권기훈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,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, 다중밀집 사고의 예방,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1조)

-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(안 제4조)
- 시행계획에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8조)
- 빅데이터 활용관련 사업 범위 확대(안 제1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재현)

□ 적법성 여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다중밀집 사고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
 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“빅데이터 수집·분석”을 추가하여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안 제4조(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)에서는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의 심의·자문 사항에 빅데이터 수집·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게 규정함.
 - 안 제8조(시행계획 수립)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.
- 대구시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매년 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”을 수립하고 있으며, '24년 시행

계획 수립시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- **안 제17조(빅데이터 활용)**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신림동 흥기난동, 서현동 칼부림 사건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이태원 참사 등 다중밀집 지역에서의 사고를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을 개정¹⁹⁾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, 수집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19) 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~ ⑥ 생략

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(「전파법」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)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 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<신설 2023. 5. 16.>

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 구조기관·긴급구조지원기관,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<신설 2023. 5. 16.>

⑨ 생략
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임.
- 소관부서에서는 데이터기반 행정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,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해당 없음

5. 토론요지

○ 해당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해당 없음.